'재량사업비' 전주시의원 징역형 구형

고미희, 징역 6개월 · 송정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공판 오는 2월 1일

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혐의로 고미희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송정훈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송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고 의원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증언뿐"이라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상민 기자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장관 표창

전북대병원, 재난 대응 훈련 적정 시행 등에서 높은 평가

전북대학교병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에 의거해 유사시 재난대응 조직구성 여부, 위기관리 매뉴얼, 대응절차, 시설 안전점검, 자체 방호계획, 훈련계획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잘 시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반시설로 △재난관리 조직·인력구성 △재난관리 협조체계 구축 △기관장 안전관리 활동 상시화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확충 △재난 대응 훈련 적정 시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기관장 중심으로 자체 안전관리 활동(QPS 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해 국가기반체계 관리에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장관표창은 우리 병원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예방대책 마련과 주기적 대응훈련을 통해 환자안전과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생 모집 전주시평생학습관, 16~25일

전주시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평생교육사 실습대상자를 모집한다.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가 갖추어야 할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배워 평생학습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실습은 오는 3월부터 4주(16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실습 참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평생교육 현장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을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재학중인 교육생으로 모집기한 내 전주시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tkagns33@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상공회의소지점 개점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6일 전주상공회의소 효자동 신청사 1층에서 상공회의소지점 개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과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을 비롯해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단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전주시가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지역자활센터 2곳과 자활근로사업단 5곳을 잇따라 방문해 자활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자활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전주형 자활증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전주시와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주지역 2개 자활센터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 사업장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생산물품 등을 살펴봤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전주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2개 지역자활센터에는 총 4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400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취·창업 및 탈 수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채규남 기자

완주산단 공사수주 대가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브로커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 모 건설업체로부터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공사수주를 대가로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완주군은 이 사업에 총 21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해당 업체가 선정돼 지난해 초 시설을 준공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완주군 관계자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주 전역으로 확대

오는 2월부터 33개 동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 지원대상도 확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거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지역이 오는 2월부터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노송·완산·인후·팔복센터 등 4개 센터 21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해피하우스사업을 오는 2월부터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3개 동 전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비스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화산1·2동과 효자1·2·3동, 삼천1·2·3동, 인후3동, 우아2동, 서신동, 효자4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주택관리와 수리 등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도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와 1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1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인 2010년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시했고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피하우스센터와 사업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252세대에 총 10만3,370건의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무료 건축 설계 및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자가주택 수선용 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동절기 주거지원을 위해 3월 말까지를 주거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동절기 집중 발굴 및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급여 미신청자, 동절기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단독주택 점검·보수 및 노후주택 개보수 대상가구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부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를 중점으로 편의시설 및 소화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및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 발굴·지원사업과 연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각종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2433)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서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기사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36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다 SUV차량을 들이받아 SUV차량 운전자 A(23)씨와 동승자 B(19)씨가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뿐만아니라 버스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빨리 지나려다 사고가 났다"며 "다른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기자